자극? 소통?…보수단체, 민주성지 금남로서 집회하는 까닭은

보수단체 "'비상 시국' 서로의 의견 공유…시민 소통 최적 장소" 주장
오월단체 "극우 선동·역사왜곡 발붙일 곳 아냐"…상업적 목적도 의심

보수 단체가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를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선택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보수 단체들이 당초 하나같이 5·18민주광장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가 광주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금남로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광주 시민들은 매주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왔던 점, 앞서 지난 수십년간 보수 성향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서슴지 않았던 점 등에서 "광주 시민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금남로로 오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보수 성향의 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소통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려다 경찰로부터 '같은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대신 금남로 무등빌딩 앞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단체는 '소통'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자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상 시국'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는 장으로써 집회를 개최할 뿐이라는 것이다.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광주시장이 한 쪽 계열 단체의 집회는 허용해주고 반대쪽 계열의 사람들은 불허하는 등 편중되게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한 쪽의 메시지만 들을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편중된 생각만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위험한 행위다"고 했다.

최근 광주시는 자칭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가 '광주시 5·18 정신 계승 기본조례'상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시민·이용객들의 신체·생명·안전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 시민단체와 오월 단체 등에서는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그동안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들이 광주에 와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지 않느냐"며 "그런 이들이 5·18의 역사적 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자 소통을 명분 삼아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또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1980년 계엄 상황에서 수백명 광주시민들의 피로 물들었던 곳이며, 아직도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아 그날 흘린 피의 흔적조차 위로받지 못했다"며 "45년만에 되살아나 광주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계엄령을 '합법'이라며 옹호하는 이들이 역사 현장을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이며, 극우 선동과 역사 왜곡이 발붙일 곳이 아니다.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폄훼하며 유튜브 수익을 올리는 등 상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을 집회 장소로 정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령, 정신적인 근원이자 5·18의 상징적인 공간은 민주주의와 5·18,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이들이 소위 '난동'을 부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과거 광주 곳곳에서 5·18을 부정하는 집회를 열고 유튜브 중계를 해 수천만원 수익을 올렸던 보수 단체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신념이 아니라 수익의 논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회 주최 측이 상대에 대해 인정과 존중을 하지 않고 5·18을 모욕하면서 '소통'을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되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비난 내지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3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이 오는 15일 예정된 보수 단체의 광주 집회를 반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 재논의 하나

시 이어 시민단체까지 강력 비판
시의회 입장문…대안 마련 최선

광주시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광주일보 2월 13일자 2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 조례안 의결을 강행했던 광주시의회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재논의 의사'를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해명했다.

조례안은 광주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선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산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상정됐으나,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들었고 의원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올해 첫 임시회에서 처리했다"며 "광주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기반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흥시설과의 혼재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중심 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 용적율 완화하는 것과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용적률 완화가 미분양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타지역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비교하며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건위원들은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하였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 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 시장이 재의 절차를 통해 좋은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길 기다리고 있겠다. 어려운 시기에 강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도 "시의회는 이 과제에 대해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을 했고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5~6월께 토론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광주시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산업건설위원장 등 시의회에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개정안은 끝내 통과됐다"며 "시민사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는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시의회 역시 도시계획·건축·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이날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고,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北, 눈물의 상봉장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철거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서관,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또는 해체했다.

지난해 4월에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없앴고 가장 최근에 완공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면회소마저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완료되면 금강산 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사실상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연합뉴스

전남 초등 32곳 입학식 못해

▶1면에서 계속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전남에 머무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특색있는 학교(전남형 특성화 모델)를 만들고, 통학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원거리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차량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도권이나 도심과의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을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도 교육청은 '찾아오는 전남농산어촌유학'을 통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운영해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전남지역으로 찾아오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겪고 있어 본질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의 특색과 학교의 강점을 반영해 브랜드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밀양박씨낙촌공후좌랑공파보
편찬안내
밀양박씨일재공파
密陽朴氏駱村公后佐郎公(逸齋公)派譜를 편찬코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수단(2차) : 2025. 06. 30까지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지하오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호연락 참여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연 락 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70-38
총무이사 박 인 철
(010-3480-0545)
2025. 02. 13.
밀양박씨낙촌공후좌랑공(일재공)종중
회장 박 영 호 (010-3643-1771)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상기(570729-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목련로 307-11, 301동 801호(운남동, 운남주공3단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상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3021호로 신청하여 2025년 2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14일
• 상속인 : 이은형(940201-2XXXXXX)
광주 광산구 목련로 307-11, 301동 801호(운남동, 운남주공3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2. 14. ~ 2025. 4. 26.
• 채권신고처 : 광주 광산구 장신로 52, 301호 (장덕동, BYC수완비스타)